

## NEWS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주말 기차표 취소 수수료 등  
위약금 2배...10월부터 적용

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표를 환불하면 물게 되는 위약금이 배로 높아진다. 또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 운임도 2배로 높이고, 부과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석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주말(금요일 포함)·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과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을 강화해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새 위약금 기준은 오는 5월 28일부터,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의 '출발 임박 환불'을 방지하고 좌석 회전을 개선하는 한편 부정 승차를 방지해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그간 위약금이 낮게 책정돼 일부 승객이 좌석을 대량으로 예약한 뒤 출발 직전에 환불하면서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결국 자리가 낭비되는 문제가 꾸준히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승차권 없이 탔을 때 기준 운임에 더해 부과되는 부가 운임은 기준 운임의 50%에서 100%로 높다. 부정 승차를 막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연합뉴스

## ▶1면 '이재명 호남압승'서 계속

이 후보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해 자신을 널리 알렸고, 이후 2년 8개월 동안 당 대표를 맡아 진두지휘하면서 친명(친이재명) 성향 당원들이 대거 늘어난 것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선후보 경선 투표율은 60.47%로, 민주당이 치른 역대 경선 투표율과 비교해 볼 때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다.

지난 19대 대선후보경선(2017년 4월 3일) 투표율 76.59%, 지난 20대 대선후보 경선(2021년 10월 10일) 투표율 67.3%를 밑돌고, 지난 18대 대선후보경선(2012년 9월 16일) 투표율 56.69%보다는 다소 높은 결과다.

따라서 이 후보가 오는 6월 3일 본선에서 승리하려면 이 후보에게 미온적인 민주당 지지자들과 중도층의 표심을 끌어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선은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격렬이 펼쳐지고, 대부분 큰 표차 없는 '51대 49의 승부'가 펼쳐졌기 때문이다.

## 이재명 후보 광주·전남 대선공약 살펴보니

## 전남 국립의대 설립...인공지능 산업 집중 육성

## 해상풍력·태양광 중심 대규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 국가 AI 컴퓨팅센터 확충·수도권·영남권 잇는 교통망 완성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광주·전남 지역 공약에 이목이 다시한번 집중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전남·전북을 아우르는 호남권 대선 공약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광주와 전남을 인공지능(AI), 에너지, 농생명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호남을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광주와 전남을 AI 및 에너지 산업

의 중심지로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에는 고성능 반도체를 집적한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확충하고, 기존 AI 집적단지 및 미래 모빌리티 부품 클러스터와 연계해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 지역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세우고, 나주를 한국전력과 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신안, 고흥, 여수, 부안, 새만금 등 지역에는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

고, 이를 주요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햇빛·바람 연금' 제도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유통을 확대하고, 조력발전소 건설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검토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과 전기 트랙터, 전기 축분 처리기 등 친환경 농기계 보급을 확대해 농업의 탈탄소화를 추진한다. 동시에 AI 기반 농업지구 조성 등으로 스마트 농업 기술을 육성할 계획이다. 수산업 부문에서는 생산·가공·수출이 연계된 수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해양식품 산업벨트 구축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을 키운다는 전략을 세웠다. 공공의료 강화도 주요 공약 중 하나

다.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과, 서남대 폐교로 의대가 사라진 전북에 각각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호남을 미래형 농생명·식품 산업과 공공의료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관광 산업 부문에서는 순천만 갯벌, 여수 화양 복합 관광단지,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등을 연계해 서남해안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부안과 고흥을 연결하는 노을대교 조기 착공, 완도와 고흥 연결 지원 등을 통해 생태·예술 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와 전남의 공동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되, 이전 지역의 동반 발전을

적극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교통 인프라 구축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과 전라선 고속철도 신속 추진, 군산·새만금·목포를 잇는 서해선 고속화 사업, 경전선 전철화, 광주-대구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전주-대구 고속도로,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 그리고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구축 등 대규모 교통망 확충 계획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전주가 추진 중인 2036 하계 올림픽 유치에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의 한식과 후백제 유산을 세계적 문화 자산으로 육성해 지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힘쓰겠다는 복안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기 기자 gnnews1@gwangnam.co.kr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미사가 집전된 26일(현지시간)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이 안치된 관이 운구되고 있다. 연합뉴스

## 프란치스코 교황 영면...전세계 애도속 장례

내달 5~10일, 차기 교황 뽑는 콘클라베 시작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의 애도 속에 영면에 들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지난 2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5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엄수됐다. 이날 장례 미사엔 교황을 사모한 일반 시민 등 약 25만명의 인파가 성 베드로 광장과 주변 일대를 가득 매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을 비롯해 세계 60여국 정상과 왕족, 국가 원수, 130여국 대표단이 바티칸을 찾았다.

한국 정부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조문사절단을 파견했다. 오현주 주교황청 한국대사관장과 안재홍 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장이 사절단원으로 동행했다.

후임자를 뽑는 콘클라베(Conclave·추기경단 비밀회의)는 5월 5일부터 10일 사이에 시작된다. 연합뉴스

## 광주시-관광·숙박·외식업계

## '광주 방문의 해' 성공추진 협약

광주시가 '2025 광주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지역 관광·숙박·외식업계에 손을 맞잡았다.

이들 업계는 5·18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 광주 2025 현대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굵직한 대형 이벤트 개최를 앞두고 민관이 함께 관광객들에게 숙박·여행·쇼핑 등 선진 서비스를 구현할 방침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 (사)광주관광협회와 '2025 광주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을 지난 25일 시청에서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선석현 광주관광협회장, 이은행 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장, 박현길 숙박업중앙회 광주지회장이 참석해 '광주방문의 해' 공동 대응과 긴밀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단체는 방문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 협력, 특화 관광상품 및 축제·행사·이벤트에 대한 홍보마케팅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를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외지관광객을 위한 친절·정결교육 강화, 축제·특화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등을 중점적으로 펼친다. 양동민 기자

## 광주·대구상의 "달빛철도 예타면제 확정해야"

## 공동 성명...국가균형발전 성공사례 강조

광주와 대구 지역경제계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와 대구상공회의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달빛철도는 동서회합과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가 될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타 면제 확정 시

급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염원하는 광주·대구 지역민과 경제계의 기대를 저버

리는 일이며,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대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총연장 198.8km의 단선 전철이다. 남부권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잇는 남부권 핵심 교통망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통과되며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특별법

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 포함,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지만 국토교통부가 같은 해 9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이후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상의는 달빛철도 특별법에 명시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조속히 확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서둘러 추진,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자**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